

이공계 기피에 대한 종합적 대처가 필요

“과학을 알아야 생활도 윤택” 홍보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논의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열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자 과학기술부는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시 모집이 시작되고 과학고생을 위시한 이공계를 택한 학생들도 이공학 분야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의학이나 한의학 분야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때부터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문제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후 기피현상 가속

언론이 이공계 기피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것이 이공계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공계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까지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면 어렵고 힘만 들며, 40대가 되어선 실업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묘사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선택해서는 안되는 기피직업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언론이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지나친 과



任敬淳
(포항공대 과학문화센터 소장)

잉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이공계로 진학하려던 학생들까지 자신의 판단에 회의를 느끼고 문과로 옮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진학률이 감소해도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인력 부족이나 질적 저하 문제가 가지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외국 인력을 흡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진국처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선진국형 직업 분포를 가지게 되면 전통적인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보다는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이 부상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않았으며, IMF의 높은 파고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의 벽에 부딪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데에 있다. 아직 선진국이 되기는 요원한데, 청소년들의 생각만이 앞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학기술 분야가 직업으로서 전망의 대상에서 떨어진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난 몇년간에 나타났던 벤처의 비정상적인 급성장과 극적인 몰락을 들 수 있다. 이런 벤처업계의 흥망성쇠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자라는 직업에 대한 커다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이공계 분야에서 벤처를 통한 성공은 청소년들에게 강한 희망을 주었으며 한동안 성공한 벤처기업인은 우리 사회의 우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붕괴와 함께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벤처의 신화는 깨어졌고 그 결과로 청소년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학력 실업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가 줄속으로 추진한 의약분업의 실패로 의사들의 수입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IMF 등 사태로 국민소득이 만달러의 벽에 서 있는 데도 청소년들의 머리에는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하겠다.**

게 증대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이공계 직업 분야의 상대적 위축감을 심화시켰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학교육의 위기를 절감하고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정, 출연연구소의 우수연구원에 대한 영년직 연구원제도 도입 및 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연구원제도 신설,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공로연금제 도입, 명예의 전당, 추모공원, 과학문화회관 건립 등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진작, 연구원 처우개선,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명예 제고 및 노후 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과거에 나왔던 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책에 비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공계 기피현상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처방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우선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을 선호하게 만들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나타나야 한다. 과학기술을 모르고는 돈을 벌거나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퍼져야만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자가 되려고 흔쾌히 이공계로 진학하게 될 것이다.

‘과학모르면 돈도 못벌어’

대량 생산에 기반을 두었던 20세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보다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다양한 가치관을 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날 미래의 새로운 학문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통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오락산업, 영화산업 등 문화기술의 대부분은 이런 통합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이공계 기피라는 기현상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마련한 교차지원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21세기에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과 서로 조화를 이룰 때만이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이 너무 단기적인 치유만을 강조하여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 사회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책은 오히려 국가발전에 커다란 해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난 한 배경에는 전통적인 이공계 전문직업인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던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위치가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서비스업 종들에 의해서 침식된 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발전해서는 안되며 서로 보완되면서 미래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구현은 우리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 ㉞